

금감원,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초안 공개

개인투자자 “시스템 완비 전까지 공매도 재개하면 안 돼”

무자비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 구축해야
업계·시장 의견 수렴해 완성도 ↑

금융당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 대표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전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패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초안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이를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모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에 따른 잔고를 산정하고, 차입을 확정하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해야 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한 매도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 내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

국내 78개사)을 대상으로 한다.

이 원장은 "기술적·전산적으로(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에(불법 공매도 차단)의무가 부과되면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른다"며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해 사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공개한 전자시스템 구조는 초안이라고 말하며 업계와 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금지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티브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재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렸다. 토론에 참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대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항간에 언급되는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의 미래를 자본시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펀드 1000兆, 언제든 붕괴될 수도… 관심·지원 필요”

국내 펀드 설정액 1003.4兆 집계
대규모 자금 유입에 나타난 현상
지난달 0.2% 역성장 기조 보여

국내 펀드시장이 순자산총액, 설정액 1000조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역성장 기조를 보이면서 펀드시장의 제도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당부되고 있다. 대규모 자금 유입이라는 이벤트적 요인이 발생했던 만큼 설정액 1000조 붕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신영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내 펀드 설정액은 100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총액의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역성장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펀드시장 전체 설정액은 3월 한 달 동안 부동산형, 재간접형, 특별자산형 등의 대부분의 유형이 증가를 보였으나머니마켓펀드(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영향으로 총 2조5500억원이 감소해 전월 말 대비 0.2% 역성장한 약 97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MMF 설정액은 3월 들어 분기 말 자금 수요와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직전 달 대비 12조4000억원 줄어든 18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펀드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6년 9월 처

음으로 공모펀드 설정액을 추월한 사모펀드는 지난 18일 기준 전체 설정액 중 60.0%(608조2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모펀드가 39.4%(395조 2000억원)인 것과 대비해 21.2% 높은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공모펀드가 198조원, 사모펀드가 176조원으로 공모펀드가 소폭 앞섰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다.

오 연구원은 "국내 펀드시장이 설정액 10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최근 MMF와 채권형 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언제든 1000조가 다시 붕괴될 수도 있다"며 "국내 펀드시장이 제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시장 참여자, 투자자 모두

의 국내 펀드시장에 대한 관심과 도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사용된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의 문턱도 높아졌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문으로 보여 펀드시장 내 존재감이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당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국내 펀드시장에서 57.5%를 차지하며 판매 잔고는 192

조3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펀드시장 성장세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판매 잔고는 오히려 80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펀드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모펀드가 펀드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 산업 자체의 성장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일시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펀드 산업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공모펀드의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고 마이너스 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 등을 살펴 정비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증시 변동성에 단기 금융상품 ‘인기’

투자자 예탁금, 이달 초비 6% 줄어
이탈 자금 MMF·CMA 등으로 이동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보다는 머니마켓펀드(MMF)·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5조8653억원으로 이달 초(59조 6299억원) 대비 약 6% 줄어들었다.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초 57조원으로 올라섰고, 이달 1일에는 59조6299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동 전쟁 리스크, 고환율 등으로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4%, 코스닥

지수가 6%가량 급락하자 빠르게 축소됐다.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은 MMF·CMA 등 단기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연초 15조2000억원대 수준이었던 개인 MMF 설정액은 23일 기준 16조 7162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 CMA 잔고 역시 65조9045억원으로 올해 초(63조4806억원)보다 3.82% 늘었다.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초단기 투자상품이다. MMF는 증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은 뒤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CMA도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수시입출식 계좌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장기자금 운용'보다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자금 운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현시점은 주식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는 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의 주거비가 내려갔다는 지표가 나오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IBK투자증권, 'ESG 위원회' 신설

협의회서 재정비... 신사업 발굴 주력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의회'를 재정비해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로 격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ESG위원회신설을 통해 IBK투자증권은 독자적인 ESG 경영체계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ESG 관련 신사업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 강화 ▲청렴문화 확립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과 녹색금융 확대,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의 경우 지난 2021년 탄소금융부를 설치해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난해 서정학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베트남 컨터시의 왕겨 바이오매스 발전 및 소재화 사업에 참여해 탄소배출권 100만 톤(t) 확보 계약을 성사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모든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모색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